

한국여성단체연합소식

• 한국여성단체연합소식(격월간) 제26호 • 발행일 | 2000년 8월4일 • 등록 | 서울마02626 • 발행인 | 지하은희 최신헌수 리오경숙 • 편집인 | 남윤인순 • 발행처 |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연합 • 전화 | 02-2273-9535~8 • 팩스 | 02-2273-9539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2층(100-391) • internet : www.women21.or.kr • E-mail : KWAU@chollian.net • 전리안, 하이델, 나우누리 : KWAU • 유니텔 : S4KWAU • 편집디자인 | 그래픽시선 02-732-7902



여성마당

02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여성운동의 방향

여성정책해설

05 5년간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평가와 과제

더불어 가는 여성운동

16 우리가 '근절' 하고자 하는 것?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1 여성연합소식

37 회원단체소식

60 활동일지 · 행사안내

62 회원단체연락처 / 회원단체부설기관연락처

여성운동정보

18 호주제폐지운동의 방향과 사업과제

21 모성권리에 대한 재조명과 모성보호 사회비용 분담화 방안

24 ASEM 2000을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연대와 행동의 장으로

27 현대자동차측은 식당 여성노동자들을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28 일본군 '위안부' 문제등 여성교류에 대한 남북여성의 합의를 환영한다

29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회 집단폐업 즉각 철회하라!

30 호텔 롯데파업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진압, 모성보호 깃발은 김대중 정권은 각성하라!

31 호텔 롯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선포하며

33 새로 신설된 여성부는 총괄·조정기능 및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35 경총은 호텔 롯데의 성희롱 근절투쟁에 대한 모독을 즉각 중지하라!

36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여성운동의 방향

정현백 |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장,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반 분야에 여성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우선 여성들은 정부의 통일관련 위원회, 정책자문회의, 정상회담 이후의 실무회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등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 주기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부 내 여성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통일이 나 남북교류와 연계된 여성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희망한다. 마찬가지로 여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문화교류위원회' 내에 여성분과 설치를 요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1.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방향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온 국민을 흥분으로 몰아넣을 만큼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지니는 의의는 첫째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구도가 '북미축'에서 '남북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북의 대미 외교와 관련된 사안을 상당부분 한국정부에 일임하려는 미국의 태도와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든 김정일체제의 개방의 욕동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 의의는 과거의 남북관계 변화는 대부분 남북 최고위급 지도자의 결단이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이번 정상회담은 오히려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셋째로, 정상회담은 그동안 적대적 공생관계에 머물러 있던 남북관계가 이제 상호 협력적인 공생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창출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점은 후속회담이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쟁방지, 군비축소,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 방지책 등 군사적 문제가 경제교류에 못지 않게 회담의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초두부터 군축과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후속회담을 결렬시키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되, 당장은 한반도를